□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손익 계산서

1. 주요 합의 내용과 의미

○ **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, 구체성이 결여된 미완의 합의임**

- **(주요 내용) 북한의 핵 포기와 회원국들의 보상,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11월초에 5차 회담을 갖는 데 합의하였음**
  - 구체적으로는 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을 포기하고 NPT 및 IAEA 안전 조치에 복귀하는 대신, ② 미국은 대북 불침공과 경수로 제공 논의, 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며, ③ 대북 경제 지원과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함

- **(의미)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, 포괄적·선언적 의미의 원칙론 수준의 '불완전한 합의'라는 아쉬움을 남김**
  - **협상 국면으로 전환 :** 이번 회담의 타결은 북미 양측이 상호간의 가장 민감

< 공동성명 6개항의 주요 내용 >

한반도 비핵화	- 평화적·검증가능 방법으로 비핵화 실현(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) -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에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복귀
대북 관계 정상화	- 북미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함 - 북일은 평양선언(2002. 9)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함
대북 경제 지원	- 북한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논의 - 에너지, 교역, 투자 부문의 경협 증진과 대북 에너지 지원 용의 표명 - 한국은 200만 kW의 전력 공급 제안을 재확인
한반도 평화체제	-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 - 별도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을 가짐
협의 이행	- 공약 對 공약, 행동 對 행동 원칙에 따라 합의 사항을 실천
차기 일정	- 11월초, 베이징에서 5차 6자회담 개최

한 부문을 양보하고 '주고 받기식'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북핵 문제가 '위기' 국면에서 '본격적인 협상'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, 향후의 쟁점 협상에서도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음

- **6자회담 틀의 유효 확인 :** 한반도의 비핵화뿐 아니라,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함으로써 6자회담의 다자 틀이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·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
- **민족자결의 실천 :** 이번 회담의 타결 이면에는 우리 정부의 중대 제안과 남북 대화가 주효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·중재적 역할 수행과 민족자결의 실천으로 평가됨
- **미완의 선언 :** 다만,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,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성명 형식이란 측면에서 '미완의 선언'으로 평가됨

2.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

○ **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면,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란 정치·군사적 효과 외에도 북한 경제 회생과 남북경협 확대,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마련 등 민족경제 전반에 걸쳐 상생(win-win)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**

- (북한 경제) 에너지난 해소와 외자 유입 증대, 북한의 개혁·개방과 경제 회생의 가속화 등으로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기대

- **에너지난 해소 :** 대북 송전과 경수로를 통한 200만 kW의 발전 설비가 제공되면 북한의 발전량은 1.8배 이상 증대 (2004년 기준으로 발전량이 206억 kWh → 381억 kWh)
- 에너지난 완화는 공장 가동률 제고(30% → 45%) → 생산과 수출 증대 → 외화 수입 증대 → 연료 공급 확대와 원부자재 조달의 원활화 → 공장 가동률 제고 → 생산 활동의 정상화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경제난 해소
- **외자 유입 증대 :**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정상국가로의 진입으로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국제 금융기구 가입과 투자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, 약 100억 달러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권 자금과 외국 자본의 유입 확대로 북한 경제 회생의 귀중한 자금처가 될 것임

· **경제 도약의 발판 마련 :** 무역 및 투자 확대, 외화 유입 증대 등으로 설비 현대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이 이루어지고, 경협 증진 과정에서의 선진 기술 도입과 시장 경제 마인드 확산으로 개혁·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자력갱생과 경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임

- (남북 경협) 전력을 비롯한 경협 인프라와 남북 관계 개선,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해소 등으로 경협이 확대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촉진될 것임

· **경협 인프라 개선 :** 전력·통신을 비롯한 경협 인프라 개선과 남한 내의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, 북한의 시장 경제 인식 확산과 구매력 증대 등으로 경협이 활성화될 전망임

· **경제 외적 불안 해소 :**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불안정성 해소,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로 인한 수출 시장 확대 등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

· **경제공동체 촉진 :**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 확대에 따르는 경제력 격차 완화와 대규모 인적·물적 교류 확대로 '사실상의 통일'(de facto unification)을 이룸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고 통일 비용 절감에도 기여

- (남한 경제) 대북 전력 제공에 따르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, 국가 신용도 상승과 외자 유입 증대,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르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 확보 등의 더 많은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

· **국민 부담 증가 :** 정부는 대북 중유 및 송전 비용과 경수로 건설 비용을 포함하여 총 6조 5,000억 원~1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

· **국민 경제적 효과 :** 남한의 대북 투자 증가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(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과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해 향후 10년간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, 690억 달러의 생산 유발 효과와 65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됨)

· **국가 신용도 상승 :**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르는 국가 신용도 상승으로 주가 상승과 외자 유입 증대, 외자 조달 금리 하락, 내·외국인의 투자 심리 호전 등이 기대됨

· **내수 경기 활성화 :** 남북 경협 활성화와 대북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와

원부자재의 대부분이 남한에서 조달될 뿐 아니라, 경협을 통한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제조업 공동화와 경기 양극화 현상 완화,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임

- **신성장 엔진 확보 :** 북한의 개방과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, 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'섬나라 경제'와 다름없는 남한에게 대륙과 동북아 진출 확대의 교두보는 물론,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을 제공하는 '블루 오션'(blue ocean)이 될 수 있음
- **통일 및 분단 비용의 절감 :** 북한 경제 개선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대량 난민과 군비 축소가 이루어지면 통일 및 분단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

< 6자회담 타결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>

남한 경제		북한 경제
비 용	편 익	편 익
- 경유 : 1.5억 달러 · 1,500억 원 - 송전 : 56~97억 달러 · 시설비 1조 7,000억 원 · 송전비 3조 9,000억~8조 원 - 경수로: 7억~10억 달러 · 7,000억~1조 원	- 외국인투자 12.0억 달러 - 외채 경감 93.3억 달러 - 기업 가치 614.6억 달러 - 국방비 421.5억 달러 - 병력 전환 55.2억 달러	- 에너지 증대 65~110억 달러 - 남한 투자 367억 달러 · 금강산,개성 102억 달러 · SOC 265억 달러 - 북일 청구권 100억 달러
합계: 6조 5,000억~11조 원 (65~110억 달러)	**합계 : 119.7조 원 (1,196.6억 달러)**	**총계 : 53.2~57.7조 원 (532~577억 달러)**

주: 1) 남한 경제의 대북 에너지 제공 비용은 통일부 발표치 기준임
2) 외국인 투자 신규 증가분은 1994~2004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9.4%를 기준한 것으로, 북핵 타결로 향후 10년간 기존 평균 상승률의 10%, 즉 전체의 0.94%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 (2004년 기준 127.85억 달러 × 0.94% × 10년 = 12.0억 달러)
3) 외채 경감 효과는 외평채 가산금리를 기준으로, 2004년 평균 금리 0.76%와 2005년 9월말 현재 금리 0.19%의 차이를 고려함 (총외채 1,866억 × 0.5%p × 10년)
4) 기업 가치는 상장사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× 주가 10% 상승 가정
5) 국방비 절감 효과는 GDP 대비, 2.5%에서 2.0%로의 감축을 가정 (843조 원 × 0.5%p × 10년)
6) 병력 전환 효과는 향후 10년간 병력을 30% 감축(20만 명)하여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함. 군 병력의 경제 예상 수입은 2005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30만 원 적용
7) 원화 환율은 1달러당 1,000원 기준

3. 향후 전망과 성공 과제

○ **(주요 쟁점과 전망) '행동 對 행동' 원칙에 의한 실질적 합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나, 합의문이 모호할 뿐 아니라 북미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와 불신의 존재로 구체적 사항의 합의 도출과 이행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됨**

- **경수로 제공 시기를 비롯하여 핵 포기 및 핵 사찰 수용 범위와 시기, 경수로 건설 주체와 비용 분담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**
  - **경수로 제공 시기 :** 북한은 자신의 핵 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북미 상호 불신에 기인하는 만큼, 경수로 제공을 정책 전환의 가시적 조치로 보고 '先 경수로 제공-後 핵포기를 위한 절차 착수'를 주장하고 있음
  - 그러나 미국은 '매우 뚜렷한 검증 로드맵과 해체 로드맵'을 강조하면서, '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현존하지 않는 미래의 문제'이며, 경수로 논의 시점의 '적절한 시기'란 'NPT 복귀 및 IAEA 안전 조치 이행 등이 이루어진 후'라는 입장임
  - **핵 사찰 주체 :** 북한은 NPT 가입국이 아니므로 IAEA 사찰단이 아닌 6자 회담 틀 내에서의 사찰 허용을 주장할 수도 있음
  - **기타 :**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 있어서도 북한은 UN 사령부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음

< 북핵 공동성명의 북미간 주요 쟁점 >

북한 주장	구 분	미국 주장
- 先 경수로 제공, 後 NPT 복귀 및 IAEA 안전 조치 이행	**경수로 제공**	- 先 핵 폐기 절차 이행, 後 경수로 제공 논의
- 물리적 해체가 아닌 생산 중단이나 동결(freeze)로 인식	**핵 포기 (abandon)**	- 미래의 계획까지 포함한 완전한 폐기(dismantle)의 넓은 의미
- 영변 원자로 등 존재 확인된 프로그램만을 의미, HEU 존재를 부인	**현존하는 핵 프로그램**	- 고농축 우라늄(HEU) 프로그램 존재를 자백하고 폐기
- 양국간 정치적·법적 차이를 감안한 일반적 표현일 뿐, 미국의 내정 간섭은 용납 불허	**관계 정상화: 각자의 양자 정책에 따라**	- 북한의 인권 문제는 물론, 테러 지원국, 생화학 무기와 마약 밀매 및 위조 지폐 등도 거론
- 미국의 대북 중유 지원 재개	**에너지 제공**	- 약속이 아닌 용의 표명 의미

○ **(과제) 북미 신뢰 조성을 통한 단계적 이행에 역점을 두는 한편,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과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**

- **(실질적 이행 유도)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, 단계적·동시 이행 원칙을 통한 북미간의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**
  - 단기적으로 11월의 5차회담 성과가 향후 북핵 협상의 방향타가 될 수 있으므로, 차기 회담에서는 신뢰 형성을 위한 가시적인 첫 이행 합의를 도출함
  - 예컨대, 북한이 NPT에 복귀한 후 핵 사찰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,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대북 중유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북핵 국면을 2차 북핵 위기 발발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
  -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, 남북 당국간 회담과 한중 고위급 접촉 등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설득에 주력해야 할 것임
  - 특히, 최근의 남북 관계 복원과 북핵 타결의 주도적 역할 등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유용성이 높아진 만큼, 남북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채널의 활용과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- **(경협 재원 확충 방안 마련) 중장기 대북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시중 부동자금의 '북한개발자금화 및 통일기금화'를 통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함**
  -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조성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, 일정 규모에 한해 자금 출처를 면제해주는 중장기 저리의 국공채 발행 등을 검토해볼 만함

- **(국민적 합의 도출) 대북 지원에 따르는 국민 부담이 늘어나므로 부담에 대한 편익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설득과 이해가 있어야 함**
  - 북한 경제 재건 비용이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내수 진작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, 중장기적으로는 분단 및 통일 비용 절감을 통해 한국 경제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공유·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
  -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북 지원의 합목적성에 대한 對국민 설득 방안을 강구해야 함

홍순직 수석연구위원 (3669-4183, sjhong@hri.co.kr)